

만 18세 선거권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토론회

# 교실의 정치화 논란, 해법은 없나

: 청소년 참정권과 시민교육의 과제

일시 : 2019. 3. 5. (화)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국회의원실,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 촛불청소년  
인권법제정연대

## 식 순

<b>1부</b> <b>청소년 참정권과 시민교육의 과제</b> <b>사회: 배경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b>	
--	--

14:00~14:10 (10분)	[여는 말씀 1] 심상정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여는 말씀 2] 조승래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14:10~15:10 (각 20분)	발제 1	‘교실의 정치화’ 논란에 대한 시민교육의 응답 · 허진만 (학교시민교육 전국네트워크 대표)
	발제 2	모의선거 교육 사례를 통해 본 시민교육의 과제와 교사의 역할 · 강민정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발제 3	청소년인권운동과 선거연령 하향의 의미 · 강민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휴식시간 (10분)

<b>2부</b> <b>‘교실 안의 시민’, 청소년·학생들이 제안하는 ‘교실의 정치화’ 논란에 대한 해법</b>	
---	--

15:20~16:30 (70분)	토론 1	학교의 정치화가 오히려 해답이다 · 김주은 (만 18세, 이리여고 졸업)
	토론 2	청소년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장, 군수가 탄생하는 나라를 꿈꾼다 · 이찬영 (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위원장, 고등학교 재학)
	토론 3	교사와의 토론 경험이 드물고 특수한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은가 · 이수경 (조례만드는청소년, 경남)
	토론 4	청소년의 문제입니까? 아직은 미성숙한 모든 유권자의 문제입니까? · 편대호 (인천고 재학)
	<b>종합토론</b>	

## 자료 목차

### 1부 청소년 참정권과 시민교육의 과제

- 발제 1 '교실의 정치화' 논란에 대한 시민교육의 응답 5쪽  
· 허진만 (학교시민교육 전국네트워크 대표)
- 발제 2 모의선거 교육 사례를 통해 본 시민교육의 과제와 교사의 역할 15쪽  
· 강민정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 발제 3 청소년인권운동과 선거연령 하향의 의미 35쪽  
· 강민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2부 '교실 안의 시민',

#### 청소년·학생들이 제안하는 '교실의 정치화' 논란에 대한 해법

- 토론 1 학교의 정치화가 오히려 해답이다 46쪽  
· 김주은 (만 18세, 이리여고 졸업)
- 토론 2 청소년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장, 군수가 탄생하는 나라를 꿈꾼다 49쪽  
· 이찬영 (정의당에비당원협의체 '허들' 위원장, 고등학교 재학)
- 토론 3 교사와의 토론 경험이 드물고 특수한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은가 52쪽  
· 이수경 (조례 만드는 청소년, 경남)
- 토론 4 청소년의 문제입니까? 아직은 미성숙한 모든 유권자의 문제입니까? 57쪽  
· 편대호 (인천고 재학)

# 1부

## 청소년 참정권과 시민교육의 과제

## [발제 1]

# ‘교실의 정치화’ 논란에 대한 시민교육의 응답

허진만 (학교시민교육 전국네트워크 대표)

용어 정리부터 하자. ‘교실의 정치화 논란’이라는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뭘까. ‘정치’하면 국회의원이 의사장에서 갑론을박하는, 심지어 멧살 잡고 싸우는 것이 떠올랐던 것 같다. 이런 이미지가 구축된 것은 정치적 행위가 이진투구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편협한 싸움이라는 편견과 어우러진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는 ‘순수하지 못한 행위’이고, ‘멀리 해야 할 무엇’이다. 그러니 학생들이 일찍 배우기엔 별로 좋지 않다는 것. 마치 정치를 담배나 술 정도로 치부하는 느낌이다.

대학생이 존경하는 언론인 1위를 십수 년째 지키고 있는 손석희 사장은 ‘정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고,<sup>1)</sup> 유시민 작가는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자기를 빼달라는 공문을 중앙선관위에 보내기도<sup>2)</sup> 했다. 개별 사안마다 맥락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정치를 무언가 의도가 있고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우리에게 과연 득이 될까?

## 황산테러 고교생 : 어디서도 배우지 못한다

2014년 12월 10일, 전북 익산의 한 공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오군은 익산 신동성당에서 열린 ‘신은미·황선씨의 토크 콘서트’에서 인화물질이 든 양은냄비를 꺼내 번개탄과 함께 불을 붙여 터뜨려 구속<sup>3)</sup>됐다. 오군은 다른 관객들에게 제지당하면서 냄비를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붙어 관객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 사건으로 2명이 화상을 입었다. 당시 투척 물질은 인터넷 등에서 구입한 질산칼륨, 설탕, 물엿, 황 등을 섞어 만든 사제폭탄인 ‘로켓 캔디’(일종의 고

1) 손석희 "정치? 죽을 때까지 안할 것"(2013년 11월 8일 노컷뉴스)

2) 유시민 “대선주자 여론조사서 빼달라” 공문(2019년 1월 22일 한국일보)

3)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 ‘테러’ 고교생, 일베에 출소 인증샷(2015년 2월 5일 경향신문)

체연료)였다.

오군은 범행 전날 ‘네오아니메’라는 애니메이션 사이트에 ‘드디어 인생의 목표를 발견했다’, ‘봉길센세의 마음으로’, ‘감쪽같지 않노?’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오군은 평소 북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던 중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연막을 피워 행사를 방해하고 싶었다고 했다. 구치소에 있던 오군에게 하태경 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서북청년단 재건을 도모한 정 모씨가 편지를 보내 격려와 함께 비폭력 방식을 권유했다는 후문이다.

오군은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북한의 체제가 사람을 억압하는 구조이며, 이것을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런 그에게 학교가 제공한 정보는 불행하지만 거의 없다. 교과서 속 몇 줄 짜리 북한 서술과 그마저 이야기하지 않는 교실에서 그는 인터넷 속 출처불명의 정보와 그 논리에 하루하루 빠져들지 않았을까. 현재 우리의 교실 수업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 확인과 대북관계에 관한 토론을 한다는 건 난망한 일이다.

## 의제강간과 운전면허 : 책임 능력은 언제 생기는가

작년 2학기 때 법과정치 수업에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모은 이슈가 있다. 바로 현재 만 13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의제강간<sup>4)</sup> 연령이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진 이슈는 중3 여학생이 40대 유부남과 성관계로 출산까지 한 사건<sup>5)</sup>에서 과연 이 관계가 사랑이었는지 여부였다. 성인과 미성년자 간 성관계에서 의제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는 연령은 형법은 13세 미만,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이다. 뒤집어 말하면 형법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아동복지법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 그 나이면 사리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금 쉬운 사례로 넘어가 보자. 만 18세가 되면 성인과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운전면허다. 2019년 3월 5일 기준으로 2001년 3월 5일 이전 출생자라면 취득 가능하다. 통상 고등학교 3학년이다. 운전면허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것을 국가에서 인정한다는 개념이다. 또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배우게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등의 학과 시험 내용을 살펴 보면 상당히 많

4) 의제 강간이란 성교 동의 연령(age of consent)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으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죄로 의제하는 나이는 13세이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및 그 처벌 조항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의해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한다.(위키백과)

5) 15세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무죄 ... 대법원 “사랑이다”(2014년 11월 25일 중앙일보)

은 경우의 수를 학습해야 한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합격률이 떨어진다는 사실.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단, 그에 맞는 권리 역시 당연히 부여해야 한다. 우리 현행법은 이 원칙을 잘 지키고 있을까?

## 페미니즘 찬반토론 : 혼동하고 있는 ‘분배’의 문제

시카고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였던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라고 정의한다. 정치를 좁은 의미로 해석했다는 한계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정책의 결정을 설명할 때 참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선거권이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 역시 이 분배의 문제를 함께 고민할 또 하나의 시민이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오찬호는 얼마 전 고등학교 토론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 토론대회는 찬성-반대 진영으로 나누어 경쟁하듯 반박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런데 토론주제가 페미니즘이었다.<sup>6)</sup>

찬성 : 페미니즘은 여성이 겪는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반대 : 그런데 너무 과격하잖아요. 시위 현장에서는 ‘남자의 참여는 금지한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규칙이 있던데 세상에 그런 방법으로 성공한 사회운동이 있습니까? 마치 모든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규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자신이 심리학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심리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우기면 그건 폭력이잖아요. 그런데 페미니즘은 왜 그렇게 강요해요? 본인이 화장에 반대하면 되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이 화장을 했다고 성 상품화에 길들여졌다고 욕하고 그러는지, 그거 다 자격지심 아닌가요?

오찬호는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페미니즘 논쟁도 보통 이런 식이라고 얘기한다. 상대 편 이야기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토론을 계기로 상대방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

---

6) 페미니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2019년 3월 고교 독서평설 336호)

야 정치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마저 승패를 가른다. 이긴 자가 다 먹기 때문에 필사적이다. 페미니즘은 인정의 문제였던가. 만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뇌를 포맷이라도 해야 하는 거였나?

선거권을 지금보다 1년 낮춰 만 18세부터 부여하자는 주장은 당연히 긍정적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공공의 문제에 대해 의논하는 방법과 원칙이다. 페미니즘은 일부 진영의 가치가 아니다. 공적인 정치 환경에서 동등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없다면 그건 억압이기 때문이다. 과격하게 비취진다는 느낌이 있다는 것과 실제 과격한 것은 다르다. 시민은 기득권자의 언어와 그렇지 않은 자의 언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페미니즘 관련 이야기들이 요즘 유독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은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리한 환경<sup>7)</sup>이고, 또한 개선책을 만드는 데 인색하기 때문이다.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데 힘을 쓰지 말고, 정부 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 의식화가 아닌 정치화 : 시민교육이 필요한 이유

이런 의미에서 정치는 ‘이해 관계에 대한 판단 능력’<sup>8)</sup>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판단은 사실관계를 따져서 치밀하게 검증하는 훈련으로 생겨 난다. 이런 훈련은 어디서 배워야 할까? 우리가 오해하는 ‘정치화’는 ‘의식화’를 염두에 둔 말이다. 의식화는 특정 사고방식의 주입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화는 정치 사상의 주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이해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됨을 뜻한다.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어디서 정치를 배웠을까. 누가 투표할 수 있는 온전한 ‘판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 보자.

1980년대를 전후하여 세계 각국은 분과 학문 중심의 기존 교과가 담지 못하는 사회적 요구(시민적 권리와 책무, 학교 폭력, 정치적 무관심, 선거 참여율 하락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시민교육 과목을 도입하였다.

7) 한국, 6년째 OECD 국가 중 여성 일하기에 최악의 나라(2018년 2월 20일 중앙일보)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평균 13.8이고, 한국은 34.6으로 회원국 중 가장 격차가 높다.(Gender wage gap, OECD 2017)

8) ‘이기적’인 판단이 아닌 해당 정책이 가지는 영향력으로 인해 누구에게 유리하고 또 누구에게 불리할 지를 가늠하는 것을 말한다.

▷ 유럽 주요 국가들의 교과목화 추진 당시의 집권당의 정치적 슬로건 :

- 독일 빌리 브란트 수상(사회당, 1969년)  
: "민주주의를 감행하자!" ("Demokratie wagen")
- 프랑스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사회당, 1981년)  
: "삶을 바꾸자" ("Change la vie. ")
- 영국 토니 블레어 수상(신노동당, 1997년)  
: "교육, 교육, 교육"

※ 한국 문재인 대통령

: (2012년) "사람이 먼저다", (2017년) "나라를 나라답게"

○ 유럽 주요 국가들의 학교시민교육 추진 결과

▶ 독일 : 1970년부터 '정치교양(Politische Bildung)'과목 주별로 지정, 1976년 '보이텔스 바흐 합의'안 도출 및 일반화

▶ 프랑스 : 1985년 시민교육(Education Civique) 초·중 필수과목, 1998년 고교필수과목

▶ 영국 : 2002년부터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 초등 선택, 중등 필수과목 지정(2002년 잉글랜드 적용, 2003년 이후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정)

▶ 유럽 대부분 국가 : 중앙집권제 국가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핵심 국가교육과정의 법정교과를 통해 제공하며 연방제 국가에서는 자치주별로 별도로 제도화

▶ 유럽 외 국가들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이 시민교육을 과목화<sup>9)</sup>

독일의 정치교육

독일 학생들이 어떻게 정치를 학습하는지 살펴보자. 독일교육은 '민주주의자'를

9) '교과로서의 유럽 시민교육과 그 함의'(김원태) 중 일부 인용

만들어낸다 - 언제 어디서든 정치를 가르치는 독일의 정치교육 시스템(2016년 12월 31일 한겨레21)

독일 사회 전체의 민주시민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인 내무부 산하 연방정치교육원이 청소년을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다. 1년에 네 번 <플루터>란 잡지도 낸다. 정치·사회·환경·국제·평등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청소년 눈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2016년 12월19일, 독일 베를린 브라이트샤이트 광장의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트럭 테러’가 일어났을 때 ‘평화를 잃은 광장’이란 주제로 테러를 다뤘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무장투쟁과 테러리즘을 분석한 프랑스 사회학자의 책에 대한 내용, 테러에 관한 심리학 분석, 1970~90년대 서유럽에서 벌어진 테러 역사, 다른 나라는 테러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대처하는지 등 여러 글을 올렸다. 학자들의 분석은 문답 형식으로 풀어 청소년들의 이해를 도왔다.

‘트럭 테러’의 배후를 무슬림과 난민으로 가정하고 이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글을 올린 게 아니다. 테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주고, 왜 베를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고민하게 만드는 글들이다.



## Politische Musikvideos 2016

Erstaunlich genug, dass Musikvideos nach dem Zusammenbruch des Musikfernsehens wieder so eine große Rolle in der Popmusik spielen. Jetzt sind sie zunehmend auch eine Plattform für Gesellschaftskritik. Ein politisch-musikalischer Jahresrückblick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트도 운영한다. 이 사이트 상단에 다뤄진 첫 주제도 ‘베를린에서의 테러 공격’이었다. 아주 쉬운 언어로 ‘트럭 테러’의 상황을 소개했다.



“시민들은 더 많은 희생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것이 테러리스트들이 기대하는 점이다. 테러리스트는 자유를 무너뜨린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막아야 한다. 자유로운 삶을 위해 함께 일어서야 한다. 사람들은 희생자를 추모하며 촛불을 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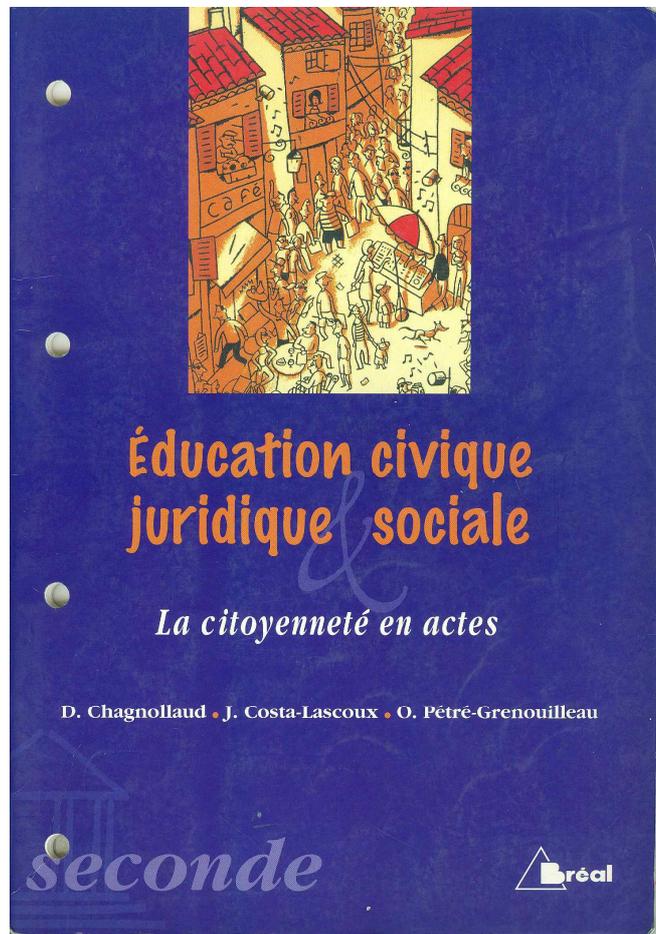
### 프랑스의 정치교육

프랑스는 1985년 시민교육이 중학교 필수과목으로 재지정되고 1998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시민교육이 포함됨으로써 중등교육 전 과정에 시민교육이 자리를 잡았

다. 중학교 과정에서 시민교육은 ‘역사·지리·시민교육’ 교과에서 이뤄진다. ‘역사·지리’와 ‘시민교육’으로 교과서와 교육과정이 구분되어 있지만 같은 교사가 가르친다.

중학교의 시민교육은 인간과 시민이라는 두 개의 핵심 개념을 기초로 해서 인권과 시민성에 관한 교육, 개인·집단적 책임의식 교육, 비판정신과 논증의 실천을 통한 판단력 함양 교육을 기본 방침으로 설정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시민교육은 ‘시민·법률·사회교육’에서 필수공통 과정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등학교 시민교육의 원칙은 ‘시민 의식은 다른 과목과는 달리 지식의 전수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과목에서 익힌 지식을 활용해 민주적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스스로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민 의식을 체득한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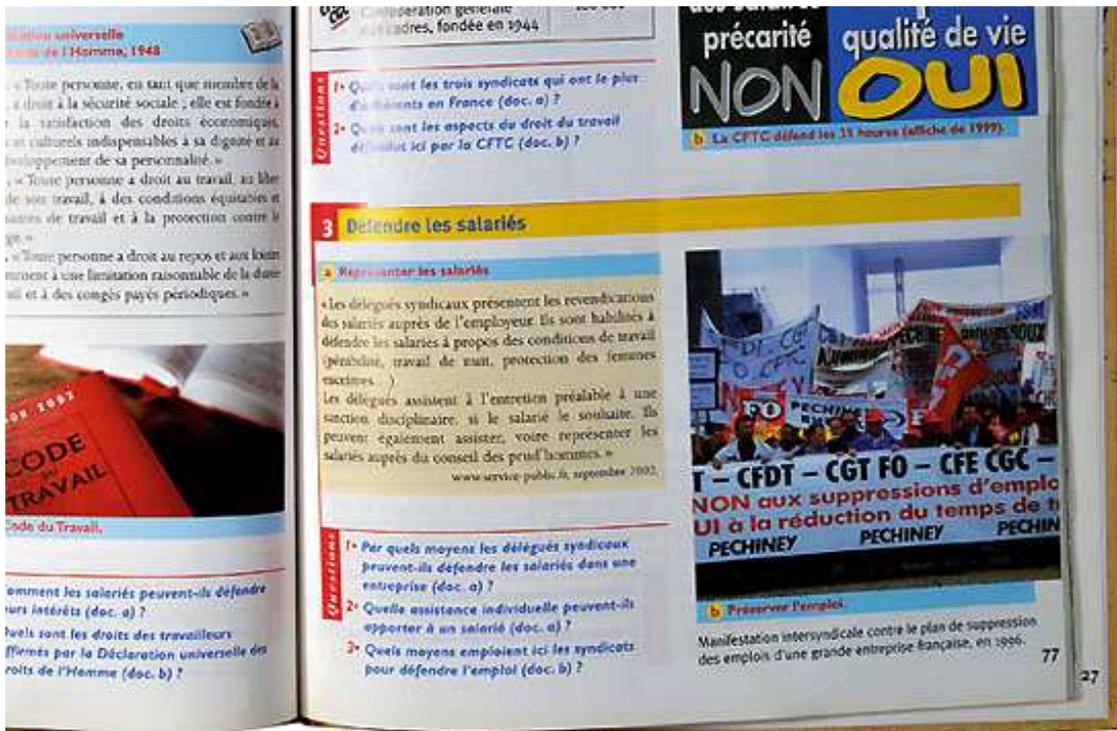
교과서 예시 \_ 《시민·법률·사회교육》(고등학교 1학년, 필수공통)

주제 7. 기업 속의 시민

토론 1. 어떻게 일할 권리를 이용하는가?

토론 2.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 노동자의 권리에 타격을 주는가?

토론 3. 불법 노동은 퇴치할 수 있는가?



프랑스 중학교 4학년 '시민교육' 교과서는, 정치 참여와 정당에 관한 내용을 다른 단원에서 프랑스 각 정당의 역사와 이념, 강령, 의식 현황을 자세히 소개한다. 노동을 다루는 단원도 프랑스 주요 노조의 이름과 역사, 가입자 수, 성향을 보여준다. 독일 중학교 '실제 정치2' 교과서의 선거 단원은 '일주일에 수업은 하루만당' '동물보호자당' 등 가상의 정당을 만들어보는 내용이다. 전당대회를 열어 강령을 정하고 후보자를 공천해 다른 정당과 선거전을 벌여 선거를 치르는 활동을 수업시간에 경험할 수 있다. 선거제도 등 개념 설명은 각 단원이 끝날 때 간단히 다루고 넘어간다.<sup>10)</sup>

10) 어떻게 극우 고등학생은 탄생하는가(2015년 2월 14일 한겨레신문)

## 정치교육,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앞서 말한 독일과 프랑스 외에도 유럽 및 영미권 나라들은 사회적 참여를 사회 속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 과정으로 여긴다. 학생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그 개선을 요구할 줄 알아야 사회가 발전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담론은 무성하지만 수능 중심으로 대입제도를 환원시키자는 주장은 그래서 안타깝다. 공정한 것이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정성의 극대화는 목표가 없다. 단지 과정의 문제니까. 이 공동체의 앞날을 고민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성인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제공할 교육적 의무가 아닐까. 정치교육은 그래서 필요하고, 또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미 잘 할 준비는 되어 있으니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 [발제 2]

# 모의선거 교육 사례를 통해 본 시민교육의 과제와 교사의 역할

강민정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 1. 교실의 정치화, 진짜 문제일까

‘교실의 정치화’란 무슨 뜻일까. 교실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다루어지는 걸 말하는가. 또는 교실에서 정치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가. 교실에서는 정치적 문제가 다루어지기도 하고 정치적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해야 한다. 교실은 아이들이 인간과 세상에 대해 배우는 곳이고, 인류의 지적유산을 전승받아야 한다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보다 개개인의 삶과 그 총체로서의 사회 전체의 삶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 교실은 텍스트에 갇혀 죽은 지식을 배우는 지루한 곳이 되고 만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치적 문제를 좁은 의미에서 정치권에서 다루는 문제로 해석한다 해도 정치권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모두 우리 사회,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일상과 관련된 문제들이라는 사실로부터 삶을 배워야 하는 교실은 정치적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sup>11)</sup> 정치적 문제라는 말을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모의선거를 다룬 EBS 지식채널e 프로그램에서<sup>12)</sup> 스웨덴 8학년 학생이 ‘정치는 우리 삶에 영향을 주잖아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장면은 신선하면서도 의미심장하다.

11) 영국의 민주시민교육 기본지침에 해당하는 크릭보고서 제10장에서는 ‘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참여하게 대립되는 성인들의 주제로부터 보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의연하고, 정확하고, 균형감각 있게 다루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다.

12) 지식채널e,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2016.3.30.) 방송

‘교실의 정치화 논란’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말에는 교실의 정치화는 부정적이 라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교실의 정치화 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실의 탈정치화 주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실은 정치와 멀어야 한다는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수세적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교실이 정치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특정한 이데올로기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들을 탈정치적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교육관이다. 4년마다 한 번씩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선거가 있고, 또 다른 사이클로 4년마다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며,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있다. 우리 아이들은 빠르면 1년, 늦으면 12년 후에 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주권자가 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모든 아이들은 만 19세가 되면 정치적 판단과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 이 미래 주권자들이 선거권을 갖기 직전까지 받는 12년 공교육 기간 동안 정치와 ‘거리를 둔’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 교실의 정치화를 문제 삼는 이들의 생각이다. 교실의 탈정치화는 아이들을 정치적 문외한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치적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주권자가 많을수록 구태의 정치로 이익을 보는 세력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준거가 되는 헌법이야말로 정치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선언하고 있다. 제1조는 대한민국의 국체를, 제2조는 국가권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 현실 정치가 민주공화국의 정치답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로부터 정치는 최소한 기피하거나 혐오하는 대상이 되어 왔다. 교실의 정치화를 문제 삼는 이들은 이런 우리 정치현실과 그로부터 형성된 정치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교실에서 정치적 문제를 다루거나 정치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금기시하거나 반(反)교육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후진적인 정치의 수준을 끌어올려 민주공화국에 걸맞은 정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실의 정치화는 더욱 필요하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독점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일상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사적 문제들이 공적 문제들과 갖는 연관성에 대해 깨어있으면 있을수록 개인과 사회의 동시적이며 선

순환적 발전이 가능해진다. 시민적 권리와 의무를 자각하고 그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하는 사람이 많은 정도에 비례해 그 사회의 민주주의 지수는 높아진다. 그런데 ‘누구도 독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듯 성숙한 민주시민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sup>13)</sup> 민주시민은 길러지는 것이며 여기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얼마나 퇴행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생생하게 목도하였다. 민주주의가 없이 민주주의는 지속될 수 없다. 유일한 이유라 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 정치의 후진성은 지난 시절 탈정치화 교육의 산물이기도 하다.

교육적 관점에서만 말해본다면 갈릴레이의 지동설을 배우면서 당시의 정치상황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국어 시간에 다루는 거의 모든 문학작품이나 글들이 인간의 일상이나 사회와 분리시켜 설명될 수 있을까. 핵 발전원리를 배우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그 정치사회적 맥락을 생략할 수 있을까.<sup>14)</sup> 기술·가정이나 사회, 윤리 교과 시간에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의 역할, 경제에서 가정의 역할, 가족제도와 형태의 변화과정 등을 사회정치적 맥락을 떼어놓고 설명이 가능할까. 흔히들 인류사적 보편지식에 해당하는 지식이나 가치는 정치와 무관한 어떤 중립적이고 순수한 것인 듯 말하지만 현재적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보편지식조차도 그 자체가 정치적 맥락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에서 ‘정치적 진공상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죽은 지식, 활자화된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을 교육이라 여기는 관점의 결과다. 이러한 교육관이야말로 교육목적이나 교육적 효과라는 점에서 볼 때 반(反) 교육적이라 할 수 있다.

## 2.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실천적 의미

교육기본법 제2조<sup>15)</sup>는 교육목적이 민주시민 양성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법은 강제성을 갖는 규율인데 처벌조항이 없어서일까.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민주시민교

13) 테오도르 에센부르크

14) PISA도 2015년부터 평가지표에 ‘과학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중요한 요소로 추가하였다. 단순 물리학 원리에 대한 지식 자체만을 학습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배움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을 표명한 것이다.

15)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기관이기보다는 입시 선발기관이기를 요구받고 있다.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정 이념을 교육하는 것으로 왜곡되어 이해되거나 교과서 속 민주주의 제도에 관한 지식교육으로 협소하게 이해되어 왔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그나마 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경우에도 학생자치 활성화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 확산되고 교육부나 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긴 것은 격세지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현장에서 과거 교육의 잔재는 여전히 강력하고 지배적인 현상이다. SKY 캐슬이 엄청난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최고 인기 드라마가 되고, 학생들이 대한민국 아동 보고서를 직접 작성해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교육을 고발하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교육기본법 제2조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되돌아 볼 일이다. 교사와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적 지원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하는 주객관적 요인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조항<sup>16)</sup>을 현실에서는 가능하지도 않는 교육의 정치적 진공상태로 등치시키는 법 현실이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첫째, 교육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과 정파적 목적의 악용을 막아야 한다는 점, 둘째, 정치적 입장이나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성인 교사가 교육적 행위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만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헌법 제31조의 정신이며, 독일 민주시민교육 원칙<sup>17)</sup>인 보이텔스바흐 합의<sup>18)</sup>의 첫 번째 원칙이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논쟁성 재현이라는 두 번째 원칙으로 이어진다.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

16) ‘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 조항을 ‘헌법 제5조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와 비교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17) 독일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보다 정치교육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합법적 선거에 의한 히틀러의 집권, 아우슈비츠의 교훈은 정치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을 길러낼 필요성에 대한 뼈아픈 사회적 각성을 불러일으켰고, 법·제도상의 민주주의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18) 보이텔스바흐 합의(1976) 3원칙은 1. 교화·주입 금지 원칙, 2. 논쟁성 재현 원칙, 3. 학생이해 상관성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독일 정치교육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합의의 성격을 갖는다.

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논쟁성 재현 원칙) 즉 논쟁이 되고 있는 사회현안을 학교에서 다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는 논쟁이 재현되는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교화와 주입을 방지하는 교육학적 방법임을 천명한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교실의 정치화를 교사의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거나 현재 한국 정치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수준 낮은 정치적 반목과 비민주성이 교실에서 복제되는 것에 대한 염려라고 해 보자. 전자는 교화와 주입을 방지하는 교육적 방법인 논쟁성 재현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첫째, 안타깝지만 학생들은 한국 정치인들보다 덜 오염되어 있고 훨씬 개방적이며 유연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실은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수하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현실 정치인들과는 달리 학생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로부터도 기인한다. 둘째,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교육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교원 스스로의 공동체적 연구와 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교원학습공동체는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 제1, 2원칙은 학생을 특정한 지식이나 생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전자의 관점에 서면 많이 반복하고 주입할수록 교육효과는 높겠지만 후자의 관점에 서면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을 설계하고 이끄는 것에 의해 교육효과가 결정된다. 여기에 교육전문성의 영역이 비로소 등장한다. 엄밀하게 말해 전자는 교육이라기보다 훈육이라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체벌과 함께 세팅된 무한반복 교육방식은 그 존립근거를 상실했다. 지식습득 양과 속도가 아니라 지식활용과 창조가 중요해지는 디지털 중심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실에서 정치적 문제, 논쟁이 되고 있는 사회현안을 다루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법조항을 악용하는 것<sup>19)</sup>이거나 최소한 잘못된 이해한 결과다. 교실에서 '학생들을 정치적 문제로부터

---

19) 실제로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을 교실의 탈정치화,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것을 범죄시키는 것으로 변질시킨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 시에 하위법인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나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교과서 속에 활자로만 담긴 민주주의 체도에 대한 지식교육 외 교육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의 탈정치화로 왜곡하여 등치시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회현안을 학교교실 안에서 다루는 것을 금기시하고 선거권 인하를 반대하는 목소리의 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의 사고는 '교육=지식(중심)교육-5지 선다형 객관식 평가-상대평가(줄 세우기)'라는 일관성을 가지며 완성된다. 그러니 교실의 정치화를 문제 삼는 세력과의 논쟁은 교실에서 정치적 문제를 다룰 것인가 아닌가, 혹은 선거연령을 낮출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넘어 보다 본질적인 교육관의 문제이며 총체적 교육체제<sup>20)</sup>와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다.

### 3. 모의선거로 배우는 민주주의

#### 1) 모의선거의 교육적 의의

대의제 사회에서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자 방법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며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sup>21)</sup> 이 점에서 볼 때, 학교 민주시민교육에서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이 선거에 대해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에 대한 교육은 거의 선거제도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고 암기하고 시험문제에 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민주주의는 지식이 아니라 문화로 체득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와 같이 지식습득에 머무는 선거교육은 지극히 부족하다 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의선거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현안 교육이다. 자신이 사는 지역과 국가 전체 문제에 대해 다양한 후보들의 서로 다른 공약을 통해 공적 문제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여러 정치적 입장을 가진 정당과 후보, 공약들이 충돌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가장 논쟁적인 형태를 띠는 주제이자 방식이다. 당연히 학생들은 후보 공약들을 통해, 그리고 선거운동의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투표해보는 과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의 이해관계와의 연

법, 선거법 등을 개악함으로써 완성되었다.

20)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제도, 교육정책 등

21) '민주주의에 대해,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해'

관성을 집중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교사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교화·주입하지 않는다는 보이텔스바흐 합의 제1원칙을 전제로 한다.<sup>22)</sup> 모의선거는 주제의 성격과 교육방법 면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에서 제시된 3원칙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교육활동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의선거는 활동과 체험을 통한 역량 중심 교육 실천이기도 하다. 선거일이 그저 하루 쉬는 공휴일에 불과했던 학생들에게 선거는 이제 교과서 속 제도지식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연관되어 있으나 완전히 공공적 성격을 띠는 문제들로 사고의 범위가 확장되도록 하며, 주권을 위임할 대표자를 뽑는 일이 갖는 중요성을 체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모의선거는 법적 효력이 없을 뿐 스스로 주권자이자 투표권자이자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각이 가장 생생하게 가능해지도록 한다. 당연히 이 과정을 통해 선거제도, 정당, 의회 및 지방자치 등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도 교과서라는 텍스트나 교사의 설명만으로 이루어졌던 교육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적으로 설계되고 진행되는 모의선거 경험을 최소 6년 이상 하고 사회에 나가 실제 투표권을 갖는 유권자가 된다면 우리의 선거문화나 정당문화와 정치수준은 눈에 띄게 높아질 것이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결과가 학생들의 민주시민성을 높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특히 정치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지수를 획기적으로 높이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아닌가.

그동안 학교 밖에서 선거를 계기로 한 모의선거가 이루어져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YMCA와 청소년단체들이 주도하여 진행한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시의 청소년 모의선거다. 이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시도된 학교 밖 모의선거는 ‘모든’ 학생들에게 경험이 공유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홍보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참여하는 학생들이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의선거는 사회문제에 개어있는 일부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유권자체험교육을 받는다. 일정 나이가 되면 모든 국민이 유권자가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모든 학생들’이 유권자 교육을 받도록

---

22) 보이텔스바흐 합의 뿐 아니라 선거가 갖는 정치적 민감성이 극도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거법 자체에 의해서도 이 원칙은 철저히 지켜질 수밖에 없다.

해야 한다. 학교 밖 모의선거가 학교가 포괄하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민주 시민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모의선거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 일환으로 진행되는 모의선거야말로 미래의 다수 유권자를 길러내는 공교육의 책무로서 적극 추진 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의선거가 갖는 또 다른 교육적 의미는 그것이 학교 교육 과정의 일부로 진행된다는 점에 있다. 모의선거가 일회성 체험으로 끝나거나 학생(청소년) 개인의 학습에 머무는 것<sup>23)</sup>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의 지원 하에 전 과정을 교육적으로 설계하고 진행된다는 점이다. 사전에 수업이나 공식 교육활동 시간을 통해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모의투표 이후에도 이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추수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모의선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런 과정이야말로 선거에 ‘대해’ 배우고, 선거를 ‘통해’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이라 할 수 있다.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모의선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회 전반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며 당연히 정치의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모의선거교육은 ‘어린 시민’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동시에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요구되는 것이다.

## 2) 다른 나라의 모의선거교육

많은 나라들에서는 일찍부터 실제 선거와 연계하여 학교에서 정식 교육과정으로 선거과정을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재현하는 방식으로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그 나라도 적지 않다.

독일은 1999년부터 시작해 2002년 전국 모든 주에서 ‘청소년 모의선거(Juniorwahl, 유니어 발)’을 실시하고 있다. 연방총선, 주의회선거, 유럽의회선거에서 실제 선거일 7일 전부터 7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모의선거 결과는 실제 선거 당일 정식 투표가 종료된 직후 발표한다. 학교는 약 한 달간 후

---

23)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의선거는 주최 측에서 관련된 사전 홍보와 정보전달 작업을 하지만 참여하는 학생(청소년)의 개인적 관심이나 탐구 정도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그 교육적 효과가 일어난다는 한계가 있다. 이 점에서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의 일부로 모의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갖는 의미는 더 커진다.

보자 공약집과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선거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22년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모의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학교 모의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특히 벤자민 프랭클린 초등학교는 1968년부터 50년 넘게 실시된 모의선거 결과가 실제 선거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여<sup>24)</sup> ‘죽집게 학교’로 불리며 CBS 등 많은 언론에서 그 결과를 주목할 정도다. 일본도 여러 현의 학교에서 실제 선거 시기 이와 연계한 모의선거가 실시된다. 가나가와현에서는 교육위원회 주도로 2010년 참의원선거의 모의투표를 모든 현립 고교에서 시행하였다. 이 모의선거에는 144개교 학생 3만 1,200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의무투표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나라 중 투표율이 가장 높은 스웨덴<sup>25)</sup>에서도 학교 모의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학교 모의선거는 중·고등 수준의 공립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총선 및 유럽의회 선거기간에 실시한다. 학생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제 선거방식과 동일하게 투·개표를 진행하고 학생회에서 정당원을 부르거나 정당에 가입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유세를 한다. 청소년 모의선거의 개표 결과는 총선 결과와 함께 신문과 TV 등의 매체에 발표된다. 스웨덴의 모의선거는 2002년에 시작되었고, 2006년 전체 고등학생의 86.66%가 참여하였다. 2013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Unga med Attityd 2013) 16세에서 25세의 스웨덴 청소년 중 40%가 정치에 대해 말하기에 관심이 있으며, 56%가 사회문제에 대해 말하기에 관심이 있고, 29%의 청소년들은 한 달에 몇 번 아는 사람과 사회 문제와 정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높은 투표율과 사회의 공적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는 스웨덴 민주시민교육의 전반적 결과라 볼 수 있지만 모의선거 교육이 정착된 것과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덴마크에서는 2015년부터 2년마다 국회와 정부가 주도하는<sup>26)</sup> 민주주의 교육 사업으로 ‘학교 선거’가 실시된다. 학교 선거(skolevalg)란 덴마크 국회와 교육부가 주

---

24) 최근 클린턴과 트럼프가 겨룬 선거결과만 실제와 달랐다고 한다.

25) 2014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85.8%

26) 라스 뢰케 라스무센(Lars Løkke Rasmussen) 덴마크 총리는 1월13일 2019년 학교 선거가 시작됨을 알리며 이를 응원하였다.

최하고 덴마크 청소년총연합회(Dansk Ungdoms Fællesråd·DUF)가 주관하는 민주주의 교육 과정이다. 14~17세 학생(8~10학년)에게 성인 유권자와 똑같이 투표할 기회를 줘 예비 유권자로서 정치 효용감을 키우는 것이 목표다. 학교선거가 의무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2019년 1월 31일 치러지는 학교 선거에는<sup>27)</sup> 769개 학교의 6만3천 명 학생(전체 학생 수는 8만 명)이 참여하였다. 학교선거에 참여하는 학교는 선거 전 3주 동안 덴마크 교육자원센터 소속 사회과학 전문가와 교육부가 개발한 민주주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 모의선거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정당은 각기 주요 쟁점 3개를 선정하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정한 쟁점과 정당이 선정한 쟁점을 비교하여 토론한 후 자신이 정한 정당에 투표한다. 학교 선거 결과는 선거 당일 저녁 덴마크 국회에서 발표하고 국영방송 <DR>과 국회방송이 생중계한다.

핀란드 역시 실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놓고 학교에서 모의선거가 교육과정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나라들에서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선거를 경험하도록 하여 주권자로서의 자각과 정치효능감을 높이는 민주시민교육이 정부나 공적 기관의 지원 아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3)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주관 2018년 ‘모의선거로 배우는 민주주의 프로젝트’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많은 교사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실제 선거를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모의선거를 교육활동 일환으로 실시해 왔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실제 입후보한 후보를 놓고 하는 모의선거보다는 가상후보를 놓고 하는 모의선거나 ‘내가 ○○○ 후보라면’이라는 주제로 공약을 만들고 투표를 해 보는 방식이 많이 시도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육방법인 측면도 있지만<sup>28)</sup> 많은 경우 학교에서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거나 엄격한 선거법으로 인해 위축된 분위기의 결과인 측면이 크다.

중등에서도 교사에 따라 선거계기교육을 진행해 온 사례가 간간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 교육과정 차원에서 진행되기보다 교사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따라서 그 방법이나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편차가 클 수밖에 없었다. 실제선거와 연

27) 실제 덴마크 총선은 2019년 6월 17일 전에 치러진다.

28) 위 다른 나라 사례 중 미국에서는 많은 초등학교에서 실제 출마한 후보들과 그들 공약을 놓고 모의선거가 치러진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학생 발달단계가 주요한 이유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한 경우에도 많은 경우 투표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후보 공약 비교분석 차원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2018년 6.13 지방 선거 전 가장 최근에 단위 학교 차원에서 실제 선거를 계기로 학교 교육과정으로 모의선거를 실시한 사례는 2017년 대선 모의선거를 진행한 서울의 금호고등학교다. 금호고등학교는 혁신학교이며 개별 교사 차원을 넘어 여러 교과가 협력하여 프로젝트 수업과 활동으로 모의선거를 진행하였다.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이사장 곽노현, 이하 징검다리)는 민주시민교육 발전을 모토로 2016년 창립된 교육시민단체다. 징검다리는 2018년 주요 사업으로 6월13일 치러지는 제7차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모의선거 프로젝트를 전국 단위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2월말 ‘모의선거로 배우는 민주주의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여 SNS를 비롯한 다양한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의 여러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프로젝트 참여를 안내하였다. 그 결과 서울, 경기, 광주, 충북에서 총 16개 중·고등학교가 동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이 모의선거 프로젝트는 민주시민교육에서 선거가 갖는 중요성에 천착하여 기획되었지만 민주시민교육의 영역과 방법을 확대하고 무엇보다 학교 교육과정 안에 모의선거 교육을 정착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아마도 징검다리가 주관하여 실시한 2018년 모의선거는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전국적 차원에서’, ‘동시에’, ‘학교 교육과정으로 실제선거와 연계한 모의선거가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일 것이다. (모의선거 프로젝트 개요는 별첨자료 참조)

징검다리가 주관하여 진행된 ‘모의선거로 배우는 민주주의’ 프로젝트는 철저하게 학교가 주체가 되고 징검다리는 지원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따라서 징검다리는 교사들이 모의선거를 교육과정으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 자료 제공과 행정적 지원과 물적 지원에 집중하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학교 간 소통과 협업을 위한 수평적 연계공간을 운영하고, 전후 과정을 2차에 걸친 보도자료 형태로 공유하여 사회적 관심을 형성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다. 최대한 학교와 교사는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학교선정이 학교 교육계획 수립 전인 2월에 이루어지지 못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계획 하에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한 점이 아쉽긴 하지만 각 학교에서는 학

교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전국 4개 지역 16개 중·고교 학생 3,283명이 모의선거에 참여하였다. 7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지방선거였지만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선거로 진행하였다. 학교 여건에 따라 1개 학년이 진행한 경우도 있고 2~3개 학년이 진행한 경우도 있다. 선거제도와 공약분석 등에 대한 사전교육도 1차시에서 3~4차시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수행평가와 연계한 학교도 있었으며 2개교는 개표 후 당선된 교육감들에게 학생들이 당선증을 직접 수여하기도 하였다.

교사들은 지역적으로 먼 거리에 있었지만 징검다리가 개설하여 운영한 카페와 SNS 소통방을 통해 계획, 진행, 결과의 전 과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여 간접적 협업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교사 개인이 혼자 하는 교육이 아닌 공동작업 성격을 갖게 되었고, 학교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기본과정을 공통으로 진행하는 집단적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실제 모의선거 교육을 통해 참여한 교사들 중 적지 않은 교사들이 자신감을 얻고 교사 스스로의 성장을 경험하였다는 평가를 해주었다.

당연히 모의선거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성장은 학생들로부터 확인되었다. 학생들은 사전에 계획된 수업을 통해 선거제도나 지방자치에 대해 배우고,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선관위를 직접 운영하여 선거의 실제 과정을 체험을 통해 배울 기회를 가졌다. 다음과 같은 학생들의 소감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의선거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다.

“학생회장 선거할 때 말고는 우리가 ‘시민’으로서 우리 의견을 표출할 기회가 사실 없다. 선거 때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명함을 다 주는데 학생들은 어차피 투표권이 없다고 안 주고 가버리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모의투표를 계기로 집에 온 선거 공보물도 한 번 읽어보고 학교 밖의 사회에 대해서 조금은 간접경험해본 것 같다.”

“선거는 성인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평소 반장 투표 같은 것도 가볍게 했는데, 오늘 교육감 모의투표를 하니 좀 더 무게 있게 느껴졌다.”

“지방선거에 사실 관심이 없었다. 이제는 엄마 아빠와 누구를 뽑는 것이 좋을지 토론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사실 이 활동을 하여 내가 투표권이 있다면 투표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교육감이 됐으면 좋겠다. 모의선거를 할 때라도 그 분께 한 표를 투표해야겠다.”

"다음에 이런 (투표) 기회가 또 있다면 관심을 가져 기회를 잡고 싶고, 나중에 커서도 나의 소중한 한 표를 좋은 곳에 쓰고 싶다."

교실에 들어온 선거는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는 ‘혼란’ 대신 유권자 되어보기를 통한 ‘주체화된 질서’를 만들어냈다. 가장 ‘정치적인’ 주제인 선거가 교육적 개입과 만나게 되는 것이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는 모의선거다. 모의선거라는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선거법, 선거제도, 선관위의 역할, 유권자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해 생생한 경험을 통해 학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합리적 사고와 깊이 있는 토론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학생들은 배움의 주체일 뿐 아니라 사회와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보다 더 좋은 민주시민교육이 있을 수 있을까. 권리와 책임이 학습된 유권자가 많아질수록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의 민주주의는 더 깊고 넓어진다. 그러니 교육적 관점에서든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든 교실에 정치를 들이는 일은 권장되고 격려될 일이다. 징검다리가 주관하여 진행한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그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별첨자료>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주관 2018 ‘모의선거로 배우는 민주주의  
프로젝트’ 개요**

**1. 프로젝트 추진 배경**

2018년 치러지는 제7차 전국지방동시선거를 맞아 실제선거와 연계하여 학교교육 과정과 결합된 체험형 선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영역을 확대하고 학교교육 안에 민주시민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모의선거교육을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프로젝트 진행 과정**

징검다리의 사전 안내 및 진행 지원 → 학교별 진행(사전 교육 및 학교별 선관위 운영 과 투·개표) → 개표결과 수합(징검다리) → 발표(보도자료 형식, 징검다리) → 평가회 → 자료집 발간

- 1) ‘모의선거로 배우는 민주주의’ 프로젝트 기획안 마련(2018.2)
- 2) ‘모의선거로 배우는 민주주의’ 프로젝트 제안서 공유(2018.3)
  - SNS 등 다양한 교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사들에게 프로젝트 참여 제안
  - 6.13 지방선거에 현직 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대거 출마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교육청 및 지자체와의 협력은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진행
- 3) 참가학교 신청 및 확정(2018.4)
  - 서울, 경기, 충북, 광주 총 16개 중·고등학교 참여
  - 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년단위 혹은 전교생 참여(총 3,238명 참여)
- 4) 정보 및 진행상황 공유를 위한 카페 및 카톡방 개설(2018.4초)
  - 각종 도움자료 탑재
  - 참가학교 교사와 징검다리 소통
  - 선관위 질의 및 답변서 공유(5월)
- 5) 사전교육 실시(2018.5월 말~6월 첫 주)
  - 정규교육과정 일부로 모의선거를 위해 학교별 여건에 따라 1~3차시 수업 실

시

(징검다리 제공 수업활동지 활용 혹은 교사별 자체 제작으로 진행)

· 사회, 역사, 국어 등 다양한 교과 교사 참여

· 다양한 수업방식 및 수행평가 운영

‘내가 교육감(혹은 지자체장) 후보라면’, 출마후보 공약 비교분석 등

· 수업결과물 전시 등

#### 6) 모의선거 실시(2018.6.8.~6.11)

· 학교별 선관위 구성 및 운영

· 수업 시간, 창체 시간 혹은 방과후 활용 투표

· 기표대, 투표용지, 투표함, 선거인명부 양식 징검다리 제공

· 선관위 개표 후 징검다리 수합→ 징검다리가 지방선거 종료 후 보도자료 형태로 결과 발표

· 교육감에게 당선증 수여(서울 도선고, 청주 서원고)

### 3. 학교별 진행 현황

1) 참여 학년 (전교생:3개교, 1개 학년:12개교, 2개 학년:1개교)

2) 교육과정 결합 유형 : 사회과 역사과 수업과 연계,

국어, 영어 등 교과통합프로젝트 수업형

3) 학교별로 수업은 2~5,6 차시로 진행 : ‘내가 교육감이 된다면~’

이미지 투표와 공약분석 투표

수행평가와 결합

4) 선거진행 : 학생으로 선관위 구성

수업시간, 창체 시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투표 실시

5) 소감문 작성 및 수합

※ 2개교는 교육감에게 당선증 수여

### 4. 지역별 모의선거 개표 결과

1) 전체적으로 모의선거와 실제선거 당선인은 일치하였으나 2위 이하 순위는 차이가 크게 난 편이다.

2) 실제선거 결과와 비교할 때, 모의선거 결과의 특기할만한 점은

▲ 교육감의 경우 서울에서 보수후보로 분류된 박선영 후보 지지율이 실제선거 득표율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 경기 이재정 후보의 모의선거 득표율이 실제

득표율보다 낮다는 점, 광주 장휘국 후보의 득표율은 실제 득표율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

▲ 시도지사의 경우 자유한국당(서울 김문수, 경기 남경필, 청주 황영호) 지지율이 실제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 서울은 신지예(녹색당)과 김종민(정의당) 후보 득표율이 실제 득표율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점, 광주의 경우 이용섭(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실제보다 현저히 낮고 2~4위 후보들 득표율이 실제보다 고르게 높다는 점, 청주시장의 경우 3~5위 간 득표율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등이다.

▲ 전체적으로 모의선거 결과는 실제선거보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현저하게 낮고, 광주 경우를 보면 지역당적 요소에 영향을 적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감 개표결과								
연번	지역	참가 학교수	참가 학생수	후보(득표율%,모의선거/실제선거) *사표제외				
1	서울	9	1,331	조희연 (50.6/46.6)	조영달 (25.4/17.3)	박선영 (19.9/36.2)		
2	경기	4	1,039	이재정 (29.6/40.8)	송주명 (19.4/17.6)	임해규 (19.2/23.5)	배종수 (17.4/8.9)	김현복 (8.1/9.2)
3	광주	2	428	장휘국 (50.2/38.0)	이정선 (30.4/35.8)	최영태 (14.7/26.2)		
4	충북	1	440	김병우 (60.7/57.1)	심의보 (36.8/42.9)	황신모 (0.0%)		

시도지사 지역별 개표결과						
연번	지역	참가 학교수	참가 학생수	후보	득표율(%) *사표제외	
					모의선거	실제선거
1	서울	6	1,056	박원순	42.5	52.8
				안철수	21.3	19.6
				신지예	13.1	1.7
				김문수	8.0	23.2
				김종민	5.9	1.6

				김진숙	1.7	0.4
				인지연	1.6	0.2
				우인철	0.9	0.2
				최태원	0.4	0.1
2	경기	3	618	이재명	57.1	56.4
				남경필	16.3	35.5
				김영환	9.1	4.8
				홍성규	4.9	0.7
				이흥우	3.6	2.5
3	광주	2	427	이용섭	52.1	84.1
				전덕영	16.1	5.1
				나경채	13.6	6.0
				윤민호	13.3	4.9
4	충북 (청주 시장)	1	440	한범덕	44.6	57.7
				정세영	20.9	4.7
				신언관	15.2	6.6
				김우택	10.0	2.7
				황영호	9.1	28.3

## 5. 참가학생들 소감(일부)

“중학생 때는 선거나 나라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었는데 작년에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걸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가 커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해갈지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번 지방선거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이번에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한다가에 집에 있는 선거공보물도 한 번 읽어봤다. 그동안 친구들과끼리 학교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나라에서 이런 걸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의 불만사항을 많이 반영해준 후보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후보는 그렇지 않았다”

“고등학교 1학년이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다고 하긴 어렵지만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생회장 선거할 때 말고는 우리가 ‘시민’으로서 우리 의견을 표출할 기회가 사실 없다. 선거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명함을 다 주는데 학생들은 어차피 투표권이 없다고 안 주고 가버리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모의투표를 계기로 집에 온 선거공보물도 한 번 읽어보고 학교 밖의 사회에 대해서 조금은 간접경험해본 것 같다.”

"선거는 성인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평소 반장 투표 같은 것도 가볍게 했는데, 오늘 교육감 모의투표를 하니 좀 더 무게 있게 느껴졌다."

"내가 (교육감을) 뽑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뽑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방선거에 사실 관심이 없었다. 이제는 엄마 아빠와 누구를 뽑는 것이 좋을지 토론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사실 이 활동을 하여 내가 투표권이 있다면 투표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교육감이 됐으면 좋겠다. 모의선거를 할 때라도 그 분께 한 표를 투표해야겠다."

"다음에 이런 (투표) 기회가 또 있다면 관심을 가져 기회를 잡고 싶고, 나중에 커서도 나의 소중한 한 표를 좋은 곳에 쓰고 싶다."

"난 개표를 하면서 우리 학년 친구들이 원하는 후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너무 막 찍지 않고, 정중히 투표해서 무효표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제 선거에 참여하는 느낌이 들어 사회에 관심이 생기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에게도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모의 선거지만 선거를 하려니 설렌다. 빨리 성인이 되어서 투표하고 싶다."

"사실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은 16세부터 완성된다고 한다. 투표의 결과는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우리도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투표해보고 싶다 생각도 하고 SNS에 투표 인증샷 올리는 것도 부럽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좋았다. 이제야 사회 구성원의 한 부분이 된 것 같다."

"비록 모의선거지만 처음 투표를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교육감만은 학생들과 직접 연결된 것이므로 학생들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줬으면 좋겠다."

“빨리 투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좋은 기회가 되었다.”

“투표를 빨리해보고 싶었는데 모의 선거에 참여하게 되어서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나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 손으로 모의 선거지만 뽑아보니 뿌듯했다.”

“실제 선거에 참여하는 느낌이 들어 사회에 관심이 생기고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지방선거에 더욱 관심을 끌게 되었다.”

“나에게도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교육 제도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내가 어른으로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고, 더 성장한 기분이 들었다.”

“교육감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모의 선거지만 선거를 하게 되어 설레었다.”

“교육감은 교육받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투표권이 없다는 것이 의아하다.”

“내가 선거를 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될까 봐 걱정되었다.”

“선거 공약을 처음으로 읽어 보았다.”

“처음으로 실시한 모의 선거를 통해서 성인이 되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고 결심했다.”

“한 표 한 표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청소년들도 미래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어리지 않다.”

## 6. 징검다리의 지원사항

- 1) 학교와의 협의를 위한 참고자료(공식 교육활동 가능 근거자료, 예: 교육과정 내용, 선관위 질의서 및 답변서 등)
- 2) 모의선거 진행과정 및 유의사항 공유
- 3) 수업용 활동지와 교사용 자료 샘플 제작·지원(선거제도, 지방선거, 공약분석용 내용)
- 4) 선관위 탑재 지자체장, 교육감 후보 공약서 제공
- 5) 투표관련 실무 지원(투표용지 제작 지원, 투표인 명부 양식, 기표대, 투표함, 기표용구 학교별 제공)
- 6) 학교 선관위 운영 경비(소액 지원)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10478286>

## [발제 3]

# 청소년인권운동과 선거연령 하향의 의미

강민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자고 랑시에르는 정치 바깥에서 배제된 자들이 정치 안의 몫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라고 말한다.<sup>29)</sup>*

지난 3월 말 십대 청소년 세 명이 ‘선거권은 인권’이라 외치며 국회 정문 앞에서 삭발을 했다. 그날을 시작으로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43일간의 천막 농성이 벌어졌다. 청소년들의 삭발과 농성이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불러오진 못했지만, 이 사태는 각종 언론에 보도되며 참정권을 박탈당한 한 집단으로서 ‘청소년’을, 사람들의 뇌리 속에 각인시켰다.

2018년의 두 번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상반기에도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져 6개월가량 논의에 논의를 거듭했지만 선거연령 하향 등 주요 정치개혁 쟁점들은 하나도 성과를 보지 못했다<sup>30)</sup>.

선거연령 하향 문제가 언제나 곧장 청소년 인권의 이슈로 다뤄졌던 것은 아니다. 90년대에는 대학생유권자위원회 등 대학생 단체들이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다. 당시 선거연령 하향은 청소년보다는 청년의 정치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당시 선거권이 만 20세 이상에게만 부여되어 대학생 중 상당수가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주로 제기되는 문제는 병역, 혼인, 근로 등과 관련한 타 법률의 기준과 선거권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형평성이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는 선거연령을 타 법률의 기준인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청소년 전반의 정치적 권리를 지지하는 논거가 되기는 어렵다. 청소년인권활동가인 공현은 ‘18세 선거권’을 둘러싼 관점 차이에 대해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은 선거권을 확대하는

29) 엄기호, 2014: 41

30)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이어지고 있는 2월 말인 현재 시점, 선거제도 개정 관련 현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다.

것에 관심이 많았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의 권리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이런 틈새가 드러난 것이 18세 선거권 운동의 한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sup>31)</sup>.

지난 봄 삭발시위를 하고 농성장을 지켰던 이들은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이유를 질문 받았을 때 ‘몇 살부터’ 투표권을 보장받는 것이 타당한가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만 청소년들이 겪는 차별과 억압을 이야기하면서 청소년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농성장은 청소년으로서 겪었던 또는 겪고 있는 폭력의 증언장이 되어 종종 눈물바다가 되곤 했다. 맞고 살기 싫고, 아랫사람 또는 투명인간으로 취급받지 않기를 바라고, 감시와 통제에 숨이 막혀서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한다고들 이야기했다.

삭발시위에 참여한 청소년 김윤송은 “비청소년에게는 있고 청소년에게는 없는 참정권은 둘 사이의 권력 차이를 더 커지게 하여, 어른으로서 휘두르는 권력을 만들고 또 은폐한다”고 말했다.<sup>32)</sup> 동등한 시민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존중과 인권보장을 쟁취하기 위해 참정권이라는 상징적이고도 실질적인 제도적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 1. 학생인권 제도화 운동과 청소년 참정권

청소년의 인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처음부터 제도변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던 것은 아니다. 90년대 후반 ‘중고등학생복지회’ 등의 조직들은 PC통신을 기반으로 청소년 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체벌 등 학생인권 침해 사안을 온라인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하는 역할을 했다. 2000년대 초중반에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들의 활동이 활발했는데, 두발 제한을 반대하는 서명을 10만 명 이상 조직해내는 무시 못 할 성과가 2000년과 2005년 두 번씩이나 이뤄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학생 두발 제한 등과 관련한 학생인권 현실이 눈에 띄게 변화하지는 못했다.

청소년 인권 보장을 목표로 일정 규모 이상 조직한 첫 번째 제도화 운동은 2006년의 학생인권법 제정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단체 외에도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체를 조직하여 서명운동과 집회 등을 이어갔다. 결국 학생인권법 발의자였던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이 내걸었던 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학교장이

---

31) 공현·뚝코, 2016: 126

32) 황대훈 기자. “18세 선거권, 청소년에게 듣는다.” EBS, 2018년 4월 3일자 보도, [news.ebs.co.kr/ebsnews/allView/10863472/H](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863472/H).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앙상한 한 구절만 초중등교육법에 추가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하지만 2006년의 학생인권법 운동은 이후 이어질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등 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제도 개선을 통해 이루어내고자 하는 흐름의 시작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제도화를 전략으로 택하는 것이 가능해진 운동의 성장 때문이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사건의 대응이나 대중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춰 학교문화를 바꾸어내고자 했던 시도들이 의도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2010년대 초반 광주, 경기, 서울, 전북 등 네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그 과정은 조례 자체를 제정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학생·청소년의 인권 현실을 알려내며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에 맞서 싸우는 과정이었다. 학생인권조례 운동의 여파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체벌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sup>33)</sup>.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2014년 전북을 마지막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다른 지역에서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이 벌어졌고, 경남에서는 2011년에 도민 약 4만 명의 서명으로 주민발의를 했으나 도의회에서 부결시킨 경우도 있다<sup>34)</sup>.

2010년대 중반은 청소년 인권 제도화의 성과가 끊긴 상황에서 전망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유해물차단앱 설치 의무화 등 청소년 인권을 후퇴시키는 법·정책들이 도입되었다.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한편 인권이 보장되는 바람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폭력을 저지른다는 식의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반동의 시기이기도 했다.

물론 이전에도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운동이 진행되어 온 바 있으나, 이 시기를 거치면서는 왜 청소년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이토록 힘들며 청소년의 인권에 반하는 제도와 정책은 그렇게나 쉽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보다 비중 있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 자연히 청소년 참정권의 문제가 다시금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주민발의를 할 권리도 만 19세 이상에게만 부여되기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자는 주민발의서명에 그 당사자인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없었다. 조례를 통과시

3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 8항은 2011년에 개정되었다. 현재는 “학교의 장은 (...)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4) 지방선거 이후 현재 경남에서 다시 한 번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킬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는 유권자인 어른들의 눈치를 보지 청소년들의 눈치를 보진 않는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교육감이더라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개선에 도움이 될지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에서 표를 얻고자 하는 모든 정치인과 정당들도 마찬가지였다.

유권자가 아닌 집단의 목소리는 정치적으로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는 여론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최근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중·고등학생 두발자유’ 관련 여론조사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만 시행되었다<sup>35)</sup>. 청소년이 당사자인 이슈에 대해서도 성인들의 여론이 곧 시민의 여론이 되는 것이다.

## 2. 학교와 정치, 선거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쟁들

1년 전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필두로 ‘18세는 되지만 고등학생은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입학연령을 1년 당겨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만 18세가 되도록 학제개편을 하고 나서 선거연령 하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세 선거권’에 대한 주요 쟁점이 ‘고등학생의 투표’로 수렴되어 불붙자, 청소년 참정권 쟁취를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고등)학생의 투표’ 여부로 이해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고등학생을 포함한 18세의 선거권 부여가 보다 전반적인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신호탄이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대로, 고등학교 졸업 연령을 당긴 후 선거연령을 하향할 시,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투표를 하게 되는 나이를 1살씩 낮추어 ‘청소년’의 범주를 약간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청소년’이라는 신분에 부여되는 차별과 억압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학제개편 전제 선거연령 하향’ 주장은 선거연령 하향을 통해 청소년의 지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운동의 목적 자체를 무효화시키려는 주장인 셈이다.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프랑스, 캐나다 등 다수의 국가들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만17세 또는 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이 나라들은 모두 18

---

35)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여론조사는 2018년 4월 13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자 중 59%가 찬성했다. ‘중·고등학생 두발자유’에 대한 여론조사는 2018년 9월 28일 역시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8%가 두발 자유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조사 모두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수행했다.

세 또는 16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 졸업 평균연령이 한국보다 높은 18세~20세로 나오는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 독일, 핀란드, 폴란드, 체코, 스위스의 경우에도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거나 선거 성격에 따라(지방선거 등) 16세부터 선거권을 보장한다<sup>36)</sup>. 투표하는 고등학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존재한다.



한국에서만 안 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18세인 인간의 판단 능력을 문제 삼는 대신 ‘한국 사회 또는 한국 학교의 특수성’을 선거연령 하향 반대의 근거로 제기했다.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는 18세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적인 갈등이 사회에 별로 없어요. 그런 데는 충분히 학교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준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 사회같이 이렇게 정치적인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학교에까지 정치적인 갈등을 연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제)개편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찬성하기 힘들다, 그렇습니다.”

2018년 3월 15일 헌정특위 정개소위 회의록,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 발언 일부

36) 교육부와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OECD 교육지표(2016). 허진 기자. “미국 등 7개국, 17세 고교 졸업 후 18세 투표...스위스·체코 등 11개 나라는 ‘교복 입고 한표’ 중앙일보, 2017년 1월 17일자 보도 <https://news.joins.com/article/21132505>

“세계적 추세도 얘기하셨고 OECD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만 19세부터 참정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권고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충분하다는 보고를 했는데…… 우리 당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 학제 개편을 전제로 해서 18세로 하향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엇그제도 보면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정치적 성향이 너무 드러나 가지고, 평화통일 수업 한다면 김정은 환영단 신청서를 쓰라고 했어요. 이런 게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갑을관계거든요. 이런 게 아직 중등학교에……”

2018년 11월 2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발언 일부

청소년들이 입시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는 점, 교사-학생 관계가 위계적이라는 점, 제대로 된 정치교육·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선거연령 하향 반대자들이 말하는 ‘한국 학교의 특수성’이다. 물론 이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변화에 반대해왔다. 입시경쟁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자고, 교사-학생 권력관계를 바꿔내자고, 정치교육·시민교육을 도입하자고 요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선거연령 하향 반대자들은 실상 학교의 변화를 원치 않는다. 청소년들이 유권자가 아닌 상태로 남아 있기를, 교사-학생 간의 권력관계는 깨지지 않기를, 민주주의는 글로만 배우는 상황이 유지되길 원한다.

선거연령 하향 반대자들은 ‘학교가 정치화 된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전에는 무정치의 공간이었던 학교가 새롭게 정치화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뭉치 없었던 학생들이 뭉치를 쟁취해나가며 학교를 둘러싼 정치적 판도가 변화하는 문제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학교는 정치적인 공간이 아닌 적이 없다. 청소년·학생은 언제나 정치의 주체로 나서왔다. 학생인권 제도화 논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페미니즘 교육 요구와 반동적인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 거부 등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주도한 정치적 논쟁과 투쟁은 수도 없이 많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운동 당시 청소년 당사자들이 서명을 받기 위해 헌신했던 것이나, 지금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집회를 조직하고 지역사회에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청소년·학생 당사자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며 정치활동을 해온 맥락을 짚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학내에서 권력을 가진 교사가 특정 정치 성향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정치를 고민하고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때, 부당한 정치적 간섭과 권력에 의한 강요에 저항할 힘을 기를 기회도 함께 사라진다.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치적 문해력과 저항력을 기를 토대를 마련해주는 길이다. 이것은 우리 교육이 목표로 삼는 ‘민주시민 양성’ 과정이기도 하다. 학교 안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학내 구성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발화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교사가 교육활동 중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은 금지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선거연령 하향과 더불어 교육활동 중 자유롭게 동등하게 정치적 현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교육청 등에서는 정책적 모델로 삼기도 했던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참고할 수 있다. 이 합의는 학생에게 ‘올바른 견해’라는 이름으로 특정 이념을 강제로 주입하지 않을 것, 토론 수업 중에는 논쟁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것,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학생 스스로 판단해 자신의 관점을 정하도록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일각에서는 선거기간 동안 ‘학교가 정치판이 되어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하향되더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고등학생 인원은 매우 일부이며, 일반 직장이나 대학교에서는 선거기간이라 해서 능률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나친 우려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필요하다면 학교 공간 또는 교육활동 내에서의 선거운동 제한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거연령 하향은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학교 내의 권력관계와 교육 정책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같은 문제를 두고 한편에서는 ‘한국 학교의 특수성’이라며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학교의 문제점’이라며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것은 그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변화를 지지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 3. 참정권 투쟁, 어떻게 싸울 것인가

삭발과 농성이라는 투쟁 방식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만류와 우려를 여럿 접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주목을 받지 못하고 국회도 꿈쩍하지 않을 상황에 겪게 될 절망에 대한 우려,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또는 ‘청소년들’<sup>37)</sup>이 삭발과 농성이라는 과격한 방식을 택할 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했었다. 삭발과 농성을 진행했을 때 실제로 ‘청소년들이 어른 따라한다’거나 ‘청소년들이 저러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는 식의 반응도 많았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 삭발과 농성이라는 투쟁 방식은 참정권이 인권 문제라는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선거연령 하향의 문제는 정치인들의 이해타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도 안되며, 참정권을 박탈당해 고통 받는 당사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농성 개시를 선포하며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 삭발식이 진행되었던 그 기자회견은 청소년인권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왔던 기자회견이었다. 권리를 요구하며 삭발하는 청소년들의 모습 자체가 우리 사회에 그만큼 충격적이고 생소했던 것이다. 청소년 인권을 요구하는 공개 삭발식은 기록된 한국 역사상 최초이기도 했다.

참정권을 요구하며 삭발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 사실 자체가 청소년 참정권의 요구에 의의가 있다. 청소년이 권리를 요구하며 삭발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한 몸 바쳐 요구하는 것이 낯설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의견 개진은 어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연습’ 또는 ‘교육’의 과정으로 수행될 때만 인정을 받아왔다. 따라서 청소년이 비청소년과 동등한 참정권을 요구하는 것, 그것을 삭발이라는 방식으로 피력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었다.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삭발은 금기를 어기는 행위였고 삭발식과 그것을 둘러싼 대중의 반응은 청소년 참정권 요구의 본질을 드러냈다. 삭발을 한 청소년 중 한 명은 “나의 몸을 이용해 내 권리를 요구하고 싶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삭발과 농성까지 하며 선거연령 하향 법안의 4월 국회 통과, 그리고 6월 지방선거에서의 참여를 요구했으나 결국 희망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6월 지방선거일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만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모의선거’가 진행되었다. 이 모의선거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주최하지는 않았고, 한국YMCA를 비롯한 단체들의 노고로 지역 곳곳에서 시행되었다. 이 모의선거 또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청소년도 충분히 숙고하여 투표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임을 보여주고, 투표율을 통해 선거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

37) 외부로 보인 중심 주체는 청소년 당사자들이었으나, 실제로는 비청소년인 청소년인권활동가들과 연대하는 타 운동의 활동가들 또한 중심적으로 결합했던 농성이었기에 따옴표를 표시했다.

년 대중의 욕구를 드러냈다. 선거 후에는 결과를 공개하여 청소년 민심의 동향을 알리기도 했다. 비록 청소년 대다수가 참여하는 선거는 아니었지만 말이다. 한국 YMCA 등은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의선거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모의선거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다. 청소년의 행위가 늘 연습으로 여겨지는 틀 안에서만 허용되는데 참정권을 요구하는 방식마저 모의선거여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청소년 참정권을 반대하는 어른들마저 ‘투표 연습’하는 의미로 찬성해줄 것 같은 온건한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하는 시각도 있다. 모의선거가 치러지고 나면 어른들의 ‘진짜 선거’ 결과와 얼마나 비슷하거나 다른지를 위주로 청소년들의 판단력을 평가하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게 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보기도 한다. 청소년을 배제한 경선을 통해 출마한 후보들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는 조건에서 공약을 만들고 선거운동을 해온 마당에 기존의 후보들 중에 선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삭발과 농성, 그리고 모의선거 모두 청소년 참정권 요구를 알리는 데 일조한 운동이다. 선거연령 하향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그리고 통과되더라도 더 낮추기 위하여,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운동은 계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 또다시 삭발이나 농성이 진행될 수도 있다. 아마 다음 선거에서도 청소년 모의선거는 치러질 것이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가 더욱 깊어지길 바라며, 청소년 참정권 운동이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 성과 또한 함께 거두길 기원한다.

#### 4. 결론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했던 농성장에서 어떤 학생이 들고 있었던 피켓이 기억난다. 그 피켓엔 ‘투표는 최고의 인생 공부’라는 구호가 쓰여 있었다. 민주주의를 직접 누리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뜻일 것이다.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교육받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되는 학교 학생회는 그러한 기능을 별로 하지 못한다. 초·중·고등학교 학생회에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법적 권한이나 독립된 예산이 없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드물고,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용 스펙 쌓기 통로 또는 교사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기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학생들이 학교 측의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소리 높여 말할 수 없다면, 학교 측의 의도에 반해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면, 어떻게 학생들이

학생회를 통해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운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나서야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의 진의는 무엇이겠는가. 학생들의 권리가 무시되는 학생회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한다는 점 이전에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은 청소년을 시민이 아닌 존재, 어른들의 지배에 종속된 존재로 위치 지으며 정치적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새로운 정치는 지금, 선거연령 하향을 통해 최소한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과는 다른 정치적 국면이 나타나길 바란다.

## 2부

‘교실 안의 시민’, 청소년·학생들이  
제안하는 ‘교실의 정치화’ 논란에 대한  
해법

## [토론 1]

# 학교의 정치화가 오히려 해답이다

김주은 (만18세, 이리여고 졸업)

고등학교 2학년. 당시 학교에는 대자보가 수차례 붙었다. 한 교사가 머리를 염색한 학생에게 염색을 풀지 않으면 동아리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협박한 일이 시작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교사의 행동이 부당함을 알리는 동시에 두발자유를 보장할 것, 생활 규정 개정을 위한 토론장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A4 네 장짜리의 글이 학교 곳곳에 붙었다.

대자보가 붙었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로 복도는 하루 종일 떠들썩했다. 몇몇 학생들은 마지막 장에 자기 의견을 적기도 했고, 복도와 교실에서는 끼리끼리 모여 찬반에 관계없이 두발규제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 학교에 토론장이 생겨난 것 같았다. 내가 속했던 학급에서는 주제가 점점 넓어져 가고 있었다. 두발규제에서 시작한 얘기는 복장규제부터 인권조례로, 입시 체도를 지나 참정권까지 다다랐다. 대학에 간 뒤의 인생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입을 모아 고민하는 것이 오랜만이라는 걸 우리 모두 느낀 것 같았다. 공부가 아닌 얘기를 하니까 차라리 재미있다고 말하는 친구도 많았다.

그에 반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학생도 있었다. 누군가 계속해서 대자보를 훼손했다. 대자보를 찢어 버리는 족족 새로운 종이를 뽑아 다시 붙이자 빨간색 펜으로 모욕적인 글을 대자보에 남겼고, 불만이 있으면 맞대자보를 쓰라는 글에 타인에게 정치적인 의견을 드러내길 강요하지 말아 달라, 학교가 정치판이 되는 걸 더는 볼 수 없다며 화를 낼 뿐 훼손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수업 시간이 되면 우리는 모두 대자보에 대한 반응을 내보이지 않았다. 교사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은 지나치게 중립을 강조하신 나머지 대자보를 훼손한 학생을 언급커녕 그에 관한 얘기는 일절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밖에서 어떤 난장판이 일어나든지 교실에선 이에 관한 언급은 암묵적으로

금기시되었고, 교사들의 태도가 그대로 학생들에게 내려온 것이다. 대부분이 시끄러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6월 모의고사 준비에 집중하자 말했고, 가끔씩 대자보를 쓰는 행위는 학교와 본인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대자보가 붙을 때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여러 입장이 극대화되어 보여졌을 뿐 평소에도 거의 같은 모습이었다. 학생들은 사적인 공간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꺼내는 데 거리낌이 없지만, 조금만 공적인 장소로 나오는 순간 입을 닫는다. 대다수의 교사도 수업 시간에 정치에 관한 얘기는 일절 하지 않는다. 아마 학교에게 정치는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인 것 같다.

정치는 학교에 너무 위험하다며, 정치로부터 청소년을 격리시키자는 말은 선거 연령 하향의 반대 논리로 자주 쓰이는 반면,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위에서 말했던 대자보를 훼손하던 학생들이 이에 대한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대자보를 뜯은 학생이 누구든 자신에게 정치적인 의견을 강요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정치가 학교에 들어오기에는 너무나 유해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람은 그 유해한 정치를 대체 어디에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 직장에는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 집에는 둘 수 있을까. 아니면 선거권이 생기자마자 갑자기 면역력이 높아져 더는 위험하지 않은 정치를 데리고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을까?

정치로부터 청소년을 격리시키자는 말은 참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도 너무나 큰 영향을 준다. 청소년에겐 너무나 어려웠던 정치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남아 오히려 등을 돌릴지 모른다. 미성숙하고 수동적인 청소년. 청소년이 어른의 의견에 쉽게 휩쓸렸다면 모든 청소년이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고 있지 않았을까? 17년 대선 당시 진행된 청소년 모의투표 결과 2위는 심상정 의원이었으며, 작년 지방선거 당시 진행된 모의투표에서 서울시장으로 신지예 후보가 당선됐다. 이외 청소년이 수동적이지 않은 존재임을 보여 주는 여러 사례가 있음에도 내 주변의 청소년들은 항상 스스로를 의심해 왔고, 올해부터 성인이 될 나이에 접어들자 그러한 고민은 더욱 가깝게 다가왔다. 별 노력 없이 시간이 흘러 내 손에 참정권이 쥐어졌을 때 내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만 커진다. 미숙한 존재였던 나의 미숙한 선택에 대한 두려움은 정치 참여에 대한 교육이 없다면 정치에 등을 돌리게 만들면 만들었지 더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키진 못할 것이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의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시민

성장에 기여할 마음이 있다면 청소년에게서 정치라는 존재를 배격하는 것이 대체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한다. 정치에서 격리된 교실에선 어떤 세대가 자라났는가? 보호를 명목으로 격리해 길러놓고 이제 와서 20대의 정치참여율이 적다고 비난만 하고 있는 것인가.

청소년의 정치에 관한 많은 우려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갑작스럽게 정치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입시 중심주의에 따라 후보들을 뽑지는 않을까? 정말 학교가 “정치관”이 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여러 의문이 생겨날 동안 청소년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체벌이 존재하는 학교에서 입시를 강요받고, 노동 중에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도 청소년은 대신 목소리를 내어 줄 사람을 구하다 지쳐 간다. 민주주의를 이루는 게 우리 사회의 목표라면 적당한 우려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체쳐 두었던 청소년들의 고민을 바라보고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한다.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해결책은 학교를 정치화하는 것이다.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며 펼치는 여러 논리들은 정치를 마냥 두렵고 해로운 것으로 여겨 정치적 무관심을 증가시킬 뿐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목적을 이루지도,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한다. 형성적 규제를 통해 교사들의 주입적인 정치교육을 막는 것, 그리고 학생에게 발언권을 부여함으로써 학교나 교사의 정치적 신념 강요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자료조사만 하고 넘어가는 토론이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는 일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울 수 있는 토론장이 학교에 자리 잡고, 그곳에서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차차 지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전 세대에 걸쳐져 있던 정치에 대한 두려움을 천천히 벗겨낼 수 있지 않을까.

## [토론 2]

# 청소년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장, 군수가 탄생하는 나라를 꿈꾼다

이찬영 (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위원장, 고등학교 재학)

학교 내에 만들어진 정치·시사 동아리에서 선후배와 그리고 반에서 매일 만나는 친구들과 정치 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동아리 시간엔 정해진 주제 하에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동급생의 경우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짬짬이 시간에 정치 또는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곤 한다. 이러한 우리들을 보는 다른 친구들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교사들은 학생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크게 관심을 보이 않거나 진보적인 교사들은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더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저녁뉴스를 보며 자연스럽게 정치를 접하게 되었다. 반면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 시절 부모님이 “정치는 너희들이 듣기엔 어렵고 나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정치를 멀리하게 했다는 것이다. 최근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부 정치권과 보수단체는 ‘좌파 교사에 휩쓸려 투표하기 쉽다’라는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어 놓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모두 시대착오적이며, 청소년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설정하여 내린 억지 논리일 뿐이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젊어지기는커녕 더 늙어가는 현실만 가져올 뿐이다.

‘교실이 정치화되면 안 된다’라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기성세대의 주장과 우려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왜 교실이 정치화되면 안 되는지 오히려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다. 교실은 주입식 공교육만의 현장이 아닌,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실이 정치화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정치는 어른들만의 것이니까 너희는 교실에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능동적인 존재의 청소년을 수동적인 존재로 수정하고 학교라는 틀 안에 가두려는 생각과 같다.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때의 청소년들의 참여는 대단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월호 참사, 국정교과서, 정유라 부정입학 사건으로 분노한 청소년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나 역시 그들과 함께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으며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분노의 목소리를 표출하였다. 그 촛불집회는 무능한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장미 대선을 만들었다.

장미 대선에서 내가 청소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국YMCA에서 진행했던 청소년 모의투표에 참여하는 것뿐이었다. 장미 대선으로 선출된 문재인 정권 1년 차인 2018년 6.13 지방선거가 있었다. 나는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나는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관리위원으로 함께 했다. 나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의 글을 썼다는 이유로 지역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먹게 되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밝히지도, 응원하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자괴감마저 들었다.

청소년이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더 젊어질 것이다. 매년 높아지는 청년들의 취업 장벽도 허물어질 것이며 기존보다 청소년, 청년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발전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청소년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그동안 어른들에게만 맞춰 법안을 만들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청소년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려 노력할 것이며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또한 보장되어 청소년이 국민을 대표하여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피·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아직도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OECD 가입국 중 만 19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지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사실은 많이 들어서 모두가 알고 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도 2015년 선거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었다. 일본의 선

거칠 뉴스를 보면 교복을 입고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선거연령 하향은 자신이 대한민국의 주체로서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늘리는 것이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국가를 더 젊게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나는 늘 녹색당 소속의 독일의 최연소 연방의원이었던 안나 튀어만을 만든 독일의 제도를 동경하고 청소년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장, 군수가 탄생하는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청소년 참정권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한다.

### [토론 3]

## 교사와의 토론 경험이 드물고 특수한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은가

이수경 (조례만드는청소년, 경남)

### 교실과 정치

교실에서 전체적으로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경험은 한 번뿐이다. 한겨레 신문을 이용해 관심있는 이슈에 대해 모둠별로 발표를 하던 논술 수업이 있었다. 모둠 별로 한 주제를 선택해 구성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발표했다. 다른 모둠의 이야기에 첨언하고 싶은 것이나 의견이 다른 것이 있으면 토론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 의견이 오갔다.

학생이나 교사들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본 경험은 많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당시 같은 동아리 선배와 자주 이야기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헤어지고 문자로 대화를 하다가도 문득 분노했다. 학교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늘 학교 밖의 카페나 서로의 집이나 길을 걷다가 이야기했다.

교사와의 토론은 굉장히 드물고 특수한 경험이었다는 것 같다. 나는 특히 2학년 때 담임과 자주 이야기를 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당시 내가 학교에 대자보를 붙였는데, 한참 뒤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교사도 학교 근처 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했었고 학교에서 튀는 학생과 교사가 마침 같은 학년이니 나를 그 교사의 학급으로 배정한 것이었다. 그 교사와의 대화는 거침없었고, 거리낌 없었다. 그리고 굉장히 든든했다. 지지해주는 사람이라는 든든함도 있었지만, 교무실에서 큰 소리로 정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가 '60세 남성'인 교사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교무실의 그 누구도 눈치를 주지 않았고 그 교사가 담임인 학급의 학생으로 있을 때는 내

가 학교에서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다. 아마 초임이나 교직 생활이 길지 않은 교사가 나의 담임이었다면 여러 경로로 압박을 받았을 것 같다.

국정교과서 과장이 일던 때 동아리 선배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것을 그때는 의식하지 못했다. 학교에서 이야기하지 않기로 계획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랬다. 학교 안에서는 살살 눈치를 살피고, 교문을 나가야 편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교 안의 그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정치’는 교사는 물론이고 학교 밖의 일이었다.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에게 금기시되었다. 그리고 정치에 관련된 성향을 드러내는 일 자체가 교사들로 하여금 낙인 그 자체였고, 이어져 같은 학생들도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나 교사는 여러 가지 색깔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2학년 때 담임이었던 교사와 나는 솔직히 말하면 왕따였다. 우리가 왕따를 받는다고 해야 할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왕따 시켰다고 해야 할까. 그 교사도 교사 집단에게 늘 소외받았고, 나도 같은 친구들에게 늘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도 알고 있었다. 60세 남성이었던 그의 발화는 교무실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이 작지는 않았고 늘 발언권을 보장받았지만 집단 내에서는 외면받았다. 나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하나만 잘못해도 교사들은 나의 가치관과 나의 행동을 엮어 비난했고 학생들도 내가 뭘 잘못하는지 감시하는 느낌이었다.

학생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느낄 때가 있다. 학교라는 공간이 아무리 정치와 분리되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정치와 학교 구성원의 삶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수업 내용에도, 수업 중 사담을 할 때도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우연히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도, 교사들은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며 주제를 옮기고, 학생들도 잘은 모르지만 “ 쌤들 저런 말 하면 안 되지 않나”라며 수군거린다. 하지만 ‘안하고 싶다’가 아니라 ‘안해야 한다’였고, 욕구를 피해가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들이 정치를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것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았다. 익숙하지

않으니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느낌이랄까. 몰아치는 파도를 등떠밀려 막는 느낌이랄까. 막으려고 버둥대면서도 파도를 한 번 만져보고 싶어서 빈틈으로 손가락을 내밀어보는, 그런 풍경이 떠오른다. 우리는 욕구를 외면하도록 강요받는 것이다.

##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논리들에 대하여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주로 제기되는 논리들을 살펴보자.

· 더러운 정치에 청소년이 물들면 안 된다? => 더러운 정치만 경험했다면, 그런 정치만 했다면, 이제 한 걸음 물러나기를 바란다. 우리가 덜 더러운 정치를 만들 수 있다.

· 어려운 정치를 청소년이 어떻게 할 수 있냐? =>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청소년뿐만이 아니다. 모두가 알기 쉽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정치 방법과 시스템을 원한다.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해 정치를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청소년은 교사나 부모 등 어른들의 의견에 휩쓸려 투표하기 쉽다? => 흔들리고 휩쓸리는 것이 정치다. 그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도 선거마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가 국민이 본인 정당으로 휩쓸리기를 바라기 때문 아닌가.

· 교실에서 정치 이야기가 오고가면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방해된다? => 정치판이 되는 게 왜 문제인지 대답해봤으면 좋겠다. 농사꾼은 농사에 방해되니까, 간호사는 간호에 방해되니까, 보험설계사는 보험판매에 방해되니까 참정권을 박탈해야 하는 건가? 마찬가지로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방해되기 때문에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한다니, 억지라고 생각한다.

· 청소년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힘 센 친구들의 목소리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 => 죽대없이 힘 센 친구 뒤에 붙는 것은 정치인들이 가장 잘 하는 일로 보인다.

이런 논리가 계속 유지된다면, 청소년들은 정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

게 될 것이다. 궁금해도, 이야기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될 것처럼 만드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에 침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2년 동안 정치에 관한 토론을 쉬쉬해왔으니 비청소년이 되어서 참정권을 보장받으면 짱! 하고 정치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살 수도 없을 것이다.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허락한 사람만이 정치할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려로 포장한, 소수자를 향한, 보편의 생각에 숨은 독재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청소년들이 교사들의 특정 신념에 좌지우지되거나 강요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이지도 않다. 실제 나의 경험을 돌이켜 보아도 교사로부터 학생들이 특정 신념을 강요받았던 기억은 없다. 소극적으로 어떤 정권의 지지를 내비친 교사는 있었는데, 그 교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서로 ‘저 쌤, 저런 말 하면 좀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학생들이 정말 교사의 지시와 강요 아래 투표를 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학생의 위치와 교사의 위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아도 생기부를 망칠까봐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에 다른 견해를 밝히고 거센 토론을 이어나가고 교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낙인찍혀서 학교에서 지내기가 힘들까봐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투표하고 싶다, 토론하고 싶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 때 학교에 국정교과서를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였던 때가 기억난다. 그러자 인성부장이 나를 불러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찬반 논란이 거세기 때문에 함부로 붙이면 안 된다고, 대자보를 철거하라고 했다. 그때 정말 멋지게 대응하고 싶었는데, 생각이 안 나서 선생님 국정교과서 찬성하시냐고, 찬성하시면 옆에 찬성하는 대자보 하나 써서 붙이시라고 말했었다. 그렇게 말해 놓고 교사에게 찍힌 것 같아 무서워서 며칠 뒤 대자보를 철거했다. 인성부장의 말을 듣고 학교는 정말 평화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아슬아슬한 평화, 툭 건드리면 깨질 것 같은 평화를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16년 11월-17년 2월 박근혜 탄핵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광화문에서 피켓을 만들어 1인 시위를 했는데 그것이 학교에 소문이 난 후 어느 교사는 수업 중에 “이수경 같은 애가 무섭다, 저런 애가 나중에 IS처럼 테러를 일으킨다.”라고 말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에 참여하면서 나는 변화의 역사 속에 내가 함께 흐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이라고 해야 할까. 그리고 일반 시민, 일반 대중의 참여를 직접 확인하고 몸으로 느꼈다는 것, 청소년운동을 이어나가면서 사람 속에 끼어서 구호를 외쳤던 그 짜릿함이 위로가 될 때가 있다.

반면 어려웠던 점은, 청소년으로서 공부 말고 다른 것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것 같다. 나를 온전히 지키면서 하는 싸움이 있을까 싶지만, 청소년의 신분으로, 학생의 신분으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을 하면서 너무 많이 다쳤다. 너무 많은 걸 잃어야 했고, 너무 많은 걸 포기해야 했다. 다치지 않기 위해 다쳐야 했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존엄을 버려야 했다.

청소년이 공부 말고 다른 것을 한다고 했을 때, 특히 정치에 관한 목소리를 낼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포기하고 잃어야 하는 삶을 감내해야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다치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 청소년에게 어떤 자유가 있다고, 어떤 권리가 있다고 모두에게 선언된다면 학교에서 싸워야 할 상황을 맞는 학생들이 덜 두려울 것 같고, 더 안전하게 더 오래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투표하고 싶다. 토론하고 싶다. 더 거세게 목소리를 내고 싶다. 덜 다치고 싶다. 어른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소리 좀 안 듣고 싶다. 우리도 삶이 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정하고 싶다. 우리의 삶을 살고 싶다.

## [토론 4]

# 청소년의 문제입니까? 아직은 미성숙한 모든 유권자의 문제입니까?

편대호 (인천고등학교 재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인천고등학교 2학년 편대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나온 이유는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보화와 매체의 발달에 따라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치도 예외는 아니죠. 정치는 곧 저희의 교육환경 등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와 같은 동급생들은 정치에 관한 정치에 관한 많은 얘기들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서로의 정치에 대한 가치관을 지켜주기 위해 ‘그 국회의원은 어떤 스타일이고 저 국회의원은 어떤 스타일이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저희 청소년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에 대해 알면 안된다는 같은 이야기를 쉽게 듣곤 합니다. 제가 청소년 인권축제에 참여하여 청소년인권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발언을 했을 때, 주변에 있던 어른 한 분이 ‘저 청소년과 할 말이 있다’면서 위협하고, 참여한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뭘 안다고 인권 얘기를 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싶어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반대하는 분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정치는 더럽기 때문에 청소년이 몰들면 안된다. 둘째, 어려운 정치를 너희가 어떻게 하나. 셋째, 청소년들은 힘 센 친구들 혹은 부모님 등 어른들의 의견에 휩쓸리기 쉽다. 넷째,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방해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살

펴보죠. 첫 번째, 어째서 정치가 더러운 것이죠? 정치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가 그 국민들이 더 나은 국가에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이 더러운 건가요? 더러운 것은 몇몇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을 하는 지금의 정치 현황이 더러운 것이지 정치 자체는 더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만일 정치참여가 어려운 일이라 가정한다면 그것을 기피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요? 사람들에게겐 누구나 시작이 어려운 법입니다.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닐까요? 세 번째, 저희 청소년들은 초·중·고를 다니며 정치 참여 방법 중 하나인 투표를 해봤습니다. 바로 그들을 대표하는 인물을 뽑는 반장투표나 학생회장 투표가 대표적입니다. 이 투표를 할 때 누군가의 의견으로 후보 중 한명을 뽑나요? 아닙니다. 분명 선거와는 다르지만 저희에게는 의사결정력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뜻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혹은 누군가를 선택하는 능력이 있단 뜻입니다. 분명 아직은 미숙하여 어른들의 의견에 휩쓸리는 청소년들도 몇 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청소년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아직은 미성숙한’ 모든 유권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은 누군가의 의견에 쉽게 휩쓸린다’라는 식으로 일반화해서는 안됩니다. 네 번째, 저희 학생의 본분은 공부입니다. 하지만 이 공부의 뜻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미래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이 공부가 아닙니다. 이 민주 국가에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자신의 뜻을 밝히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선거연령 하향을 한다면, 청소년들의 배움의 장인 학교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여 소음문제나 교실에서의 정치적 발언 등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보완책을 마련하거나 학생들에게 주체의식을 높일 수 있는 상담 혹은 교육시간을 만들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러한 정치적 발언 속에서 자신과 맞는 뜻을 찾아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선거연령이 낮춰진다면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교육감을 뽑게 되어 그들이 원하는 교육방식, 예를 들어 두발 자유화, 교복 등을 직접 선택하여 자신들이 한 노력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것이고, 자신들이 주체적인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아주 오래 이어져 왔고 저희는 선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당장 선거 나이 제한을 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메모]

[메모]

[메모]

[메모]